

한국유기비료신문

Korean Organic Fertilizer Newspaper

제120호 2020년 2월 20일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발행

www.kofic92.or.kr / Tel 043) 231-3920 / 창간 2008년 10월 10일 / 월간

유기질비료조합, 제10차 정기총회 개최

원안대로 상정 안건 처리 안형덕 신임 전무 임명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하 유기질비료조합)은 2월 13일 오송컨벤션센터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조합은 2019년부터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갈음하고 있다.



▲ 김종수 이사장은 2월 13일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제10차 정기총회를 대의원총회로 진행했다.

김종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비료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비료관리법 개정안이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사실상 소속기관의 장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법령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규정을 잘 협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협의 과정에서 조합원사의 의견도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매년 불용되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대의원 48명중 41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총회에서는 상정된 2019년도 사업보고, 결산 및 잉여

금 처분(안), 2010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가입금 및 경비 등에 관한 규약 개정(안), 정관개정(안), 조합원 지분 산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추가 논의된 내용으로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예산증액 검토시 미배정 물량 부분 감안, 매년 발생하는 예산불용 방지를 위해 예산 전수배 시기를 10월말에서 6월말로 변경, 약취 검사시 시료를 업체당 1점만 채취하고 있는데 2점이상 확대 필요, 퇴액비 신규시설 지원 대신 기존 소규모 퇴비 생산업체 시설의 개보수 자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에 포함 등 업계 현안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 왼쪽부터 농후퇴비 박종주 대표, 김종수(농업회사법인(유)수북농업) 이사장, 비랑영농작목반합자회사 박성우 대표이사

한편 ‘농후퇴비’ 박종주 대표와 ‘비랑영농작목반합자회사’ 박성우 대표이사는 2019년 친환경비료 공급을 적극 추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표창장을 전달받았다.

김종수 이사장은 1년여 동안 공석 중인 전무자리에 2월 1일자로 안형덕 신임 전무를 임명했다.

김 이사장은 “안형덕 전무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에 재직시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2006. 9.27)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2007. 3.27)하였으며, 2007년 11월 친환경유기농업자재 목록공시 제도를 제정한 유능한 인재로서 비료관리법 등 산적한 조합 현안 애로사항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원만한 협의를 이끌어 낼 책임자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 1년여간 공석중인 유기질비료조합 전무자리에 안형덕 신임 전무가 임명됐다.

안 신임 전무는 1984년 경상대학교 농학과를 졸업하고 그 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국립농산물검토소에서 33년간 근무하다 2016년 12월 부이사관으로 퇴직후 낙농진흥회에서 3년간 전무로 근무했었다.

안 신임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 33년 행정경험을 살려서 조합원사의 상황을 헤아려 업계의 애로사항이 정부 부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고 “더불어 유기질비료조합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은혜 기자]

시험 사용 50% DC

중습니다! 오직 비료공장만을 위해,
가격 인하하니 약취로부터 해방되십시오.

가격 인하 20%
에어리페어 + FS 골드

약취 즉시 제거... 만나면 끝!

에어리페어 + FS 골드

두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광범위하게
약취를 제거하여 더욱 효과가 좋습니다.

가격 인하

세계 경쟁력 제고를
최우선으로!

전화번호만 남겨도 혜택이 팡팡!!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우린네이처

031-609-2142

약취, 가스, 민원 맞춤 해결

뉴트로 원료 혼합 & 고압분무용
한돈협회 검증사업 1등 약취제거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70, 푸름이아원 B-1017

www.woorin.info www.약취제거제.com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공급 패러다임을 지역순환 중심으로 ...

농식품부,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자원 재활용업체 등 적극적인 지원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이하 유기질비료조합) 김종수 이사장과 안형덕 신임 전무는 2월 7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이하 농식품부) 윤동진 국장실을 방문하여 유기질비료 공급 등 현안에 대해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윤 국장은 “지역사회와 자연환경을 돌아보지 못했던 영농방식을 되돌아보며, 자연과 환경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길이 모색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축 전염병 발생문제와 환경부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은 지역 단위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전제하고,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농립부산물·축산분뇨 등을 해당지역에 우선 사용하여 토양에 적합한 양분이 농경지에 공급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패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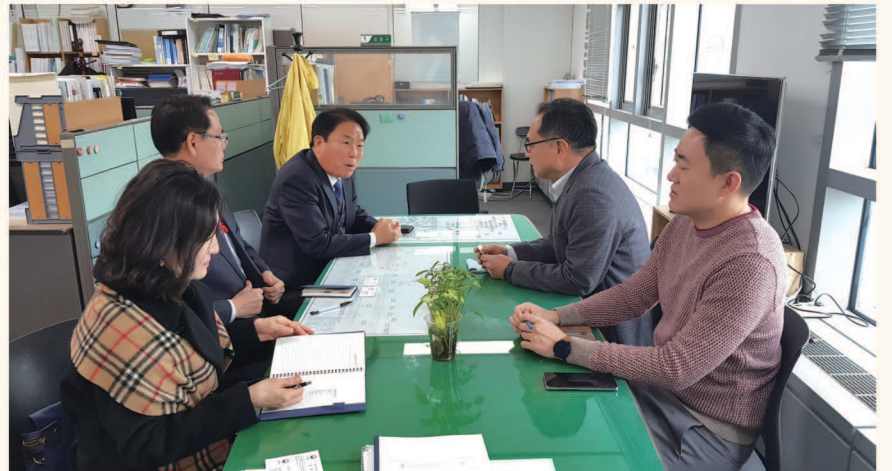
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농립사업의 지원방식도 그동안 농가 중심으로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는 정책의 목적에 따라 산업계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장할 필요도 있다고 말하고,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자원 재활용업체 등도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산업현장의 애로사항, 업계의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농식품부에 요청하면 농림부 R&D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기질비료업계에서 건의한 분석기관별 측정결과와 차이 문제와 같은 현장 애로사항도 상시 요청해 주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기자]

축산분뇨처리는 기존 퇴비생산업체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

퇴비전문유통조직 지원규모 확대 등 제도개선
사육농가, 축산분뇨처리 분담금 납부



유기질비료조합 김종수 이사장은 2월 7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을 방문하여 퇴비전문유통조직의 지원규모 확대 등 현장여건에 맞게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이사장은 “축산분뇨 처리는 기존 퇴비생산업체 위탁처리가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하며 “퇴비전문유통조직에서 뒤집기하여 1차 발효된 축산분뇨를 퇴비공장으로 가져와서 부숙도 기준을 맞추어 살포할 수 있도록 하고, 퇴비공장의 노후 시설 개보수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축산농가에서 축산분뇨를 1차 뒤집기하여 퇴비공장으로 올 경우 악취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 사육의 경우 영세 농가가 많아 자력으로 우분 등을 처리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사육농가는 처리 분담금을 납부하고, 축산분뇨처리는 유기질비료 생산업체 등 가축분뇨 재활용 전문업체가 담당하도록 할 경우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뜻을 전했다.

물환경정책국 정희규 과장은 “수질관리대책을 낙동강 시범단지로 계획하고 있으며 내용중에 양분관리제가 있다. 양분관리제 안에 축산분뇨를 적정처리해야 하는 부분도 들어 있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축산분뇨 부숙과 살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하고 수질오염관리대책 낙동강 시범단지 설계가 구상되면 유기질비료조합과 협업해 나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김은혜 기자]

친환경인증품 소비확대를 위한 우선구매 제도 도입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지자체, 군대, 학교 등 사용 확대 협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 '20년 5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률 개정 주요내용은 소비가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친환경 인증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 및 단체를 공공기관 및 농어업 관련 단체에서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어린이집, 유치원, 군대 등 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활성화를 통해 인증농업인은 친환경 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에서는 동 규정을 친환경 농산물 우선구매 요청 등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자조금위원회

를 중심으로 친환경급식 참여 학생 및 급식 관계자 체험교육, 가치확산 교육·홍보용 콘텐츠 제작·보급하고, 소비자 현장체험, 캠페인, 온·오프라인 홍보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이 친환경 인증품의 수요 확대를 통해 친환경농축산물, 유기 가공식품 등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장과 환경에 좋은 친환경 인증품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농업 확대 등 생산을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친환경농업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친환경 인증품의 소비 확대를 위해 지자체, 소비자, 가공·유통업체, 농업인, 관계기관 등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PR]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가축 방역과 농가 지원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

역학조사관 지정·도태명령 제도 도입
농가의 폐업·생계안정자금 지원

올해 2월 4일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체계와 농가 지원 강화를 위한 가축 방역 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의무기한을 단축하고,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를 부여하고,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시 가축과 직접 접촉 등의 경우 예방적 살처분 명령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새로이 부여했다. 도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 지원이 지원된다.

사육제한 명령을 받지 않은 농가 중 경영 악화 등 사유로 폐업하는 농가에 대해서도 폐업지원금이 지원된다. [PR]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지급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든 농가가 최소 100만원의 직불금을 받게 된다.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소규모 농가에는 일률적으로 연 120만원을 준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생태·환경 상의 의무는 17가지로 정리됐다. 이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직불금 총액의 10%를 깎는다. 의무 위반이 반복되면 직전 비율의 2배까지도 감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오는 21일부터 4월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농직불금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농가의 범위는 거주·생계·농업경영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법률에 규정했다.

기본적으로 농가의 범위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 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및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하도록 했다.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으려면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합이 0.5ha 이하이고,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합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농에 종사하고, 3년 이상 계속해서 농촌에 거주해야 하며, 그 외에도 농의소득, 축산업·시설재배업 소득 등의 세부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의 기준 면적 구간은 농업진흥지역 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각각에 대해 2ha 이하, 2ha 초과~6ha 이하, 6ha 초과~30ha 이하로 구분해 정했다.

각 기준 면적 구간별로 적용될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최소 100만원 이상으로 하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해 고시하도록 했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인 50ha로 하되, 과거 정당하게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기대 이익 보호를 위해 지난해 지급상한 면적을 초과해 지급받은 경우 초과

면적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재배면적관리가 필요한 경우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해 재배면적 조정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조정계획 수립 시 국내 수급상황, 수출입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농산물수급조정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익직불법에서 규정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화학비료 기준, 교육 이수 등 4개 준수사항 외에도 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수거, 영농기록 작성 등 13개 준수사항을 시행령에 신규 반영하고, 그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 등 분야별로 총 17개 사항이 도입될 예정이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각 준수사항별 기본직접지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며,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직전 감액비율의 2배를 적용하도록 했다. 다만, 준수사항이 기존보다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들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신규 도입되는 일부 준수사항은 그 활동수준과 위반 시 감액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법률에 기존의 친환경농업직불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가 선택직불제로 포함됨에 따라, 기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있는 관련 조문들을 전부개정령안으로 이관한다.

법률에서 공익직불제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리시스템 운영, 부정수급 조사·단속 등 공익직불제 운영과 이행점검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사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부정수령자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 기존의 50만원/건 및 연간한도 200만원 규정을 개정해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공익형 직불제 관리 기관으로는 농식품부 산하 농식품 관리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지정했다. 관리 시스템 운영과 함께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단속 등 직불금 집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도록 권한도 위임한다.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한 관련 법률은 오는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은혜 기재]

영농부산물 퇴비화 지원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영농부산물 파쇄작업 지원



력파쇄기 보급 확대를 추진해 영농부산물 처리로 인한 농업인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논산시농업기술센터를 찾은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등을 둘러보며 농산물 안전성 강화,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한 유용미생물 활용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새해농업인실용교육 등 농업인 대상 교육을 통해 영농폐기물과 영농부산물의 노지 소각 금지를 널리 알리고 있으며, 영농부산물의 퇴비화를 위해 파쇄작업 지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논·밭두렁에서 겨울을 난 병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논·밭두렁 내 병해충 밀도를 조사·분석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지역별 방제기술을 지도할 계획이다. [PR]

농촌진흥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업분야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작업을 지원한다.

오는 3월까지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와 협업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에 있는 임대용 동력파쇄기를 활용하여 시·군 마을 단위로 고춧대·깻대·잘라낸 나뭇가지 등 영농부산물 파쇄를 실시한다.

농촌진흥청장은 29일 영농부산물 파쇄와 퇴비화 작업이 진행된 충남 논산시 연산면 표정리 마을에서 농업인들을 만나 영농현장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농업분야의 미세먼지 발생량 낮추기에 뜻을 함께하고 산불예방을 위한 영농부산물과 논·밭두렁 불태우지 않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동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보호를 위해 2019년 11월 도입되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4달 동안 시행하는 제도

지역특화작물 유기농업 재배 안내서 나왔다

농촌진흥청, 9개 도 농업기술원과 협업·작물 10종 안내서 제작

농촌진흥청은 전국 9개 도 농업기술원과 협업해 지역특화작물 10종의 유기재배 기술을 연구하고, 작물별 유기재배 안내서를 발간해 보급했다.

최근 환경보전과 건강식품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지역에 특화된 작물을 유기재배하는 농가들이 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는 유기재배 매뉴얼이 필요해졌다.

농촌진흥청은 각 도농업기술원과 협업해 단편기술들을 통합하여 작물 전생육기에 맞추어진 종합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매뉴얼에 반영했다.

이번에 개발한 매뉴얼은 각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특화작물 중 현장에서 유기재배 기술 요구가 높은 작물 10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작물은 인삼, 가지, 곤드레, 옥수수, 수박, 고추, 양파, 포도, 매실,

무이며, 각 매뉴얼에는 유기재배를 위한 품종 선택부터 토양 관리, 양분 공급, 병해충 관리 기술이 담겨 있다.

또한 농가에서 주의해야 할 유기농업자재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뤄 유기농업을 실천하거나 희망하는 농업인은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은 지역 농가와 관계기관에 보급됐으며,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도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 유기농업과 이상민 연구관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추진된 9개 도농업기술원과의 협업으로 현장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요구하는 유기농업기술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보급해 친환경 재배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R]

남원시, 친환경 유기질비료 영농기이전 적기지원

관내에서 구입한 가축분퇴비와 퇴비 구입농가에게 보상금으로 포당 600원 지원



▲ 친환경 유기질비료 영농기이전 적기지원

남원시는 2020년 유기질 비료지원을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자격을 갖춘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6,994농가에 1,608천포(20kg/포) 25억8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3월 본격적인 영농기 이전 적기 공급으로 농립축산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한다.

금년에 공급되는 유기질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과 (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복합비료)과 가축분퇴비와 퇴비로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4일까지 23개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을 접수받아 농립사업정보시스템에 전산입력된 필지별 신청

물량을 기준으로 배정한 물량이다.

비료종류별 보조금 지원 단가는 포당(20kg) 유기질 비료(혼합유기질, 혼합유박, 유기질복합비료)는 1,700원, 가축분퇴비와 퇴비는 비료 등급(특등급~ 2등급)에 따라 1,700원, 1,600원, 1,400원까지 구분 지원한다.

금년도에는 국비 유기질 비료지원 예산이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농가 신청량대비 공급량은 71%로 농가들의 영농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 바, 남원시에서는 부족분에 대하여 하반기에 공급물량 24만여포에 해당하는 시비 3억8천만원을 추가로 확보, 관내 퇴비

공장에서 가축분 퇴비·퇴비를 구입하는 농가에게 추가 지원으로 농가혜택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남원시에서는 타시군에서 저가에 공급되는 공급물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금년도에는 관내에서 구입한 가축분퇴비와 퇴비 구입농가에게 보상금으로 포당 600원을 지원하여 농가의 자부담 부담을 줄이고 토양환경 개선과 퇴비공장가동을 증가에 따른 관내 축산농가 축분 적기 수거로 깨끗한 농장환경을 조성하고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 및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 효과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남원시에서는 금년에 배정한 물량을 3월중 공급완료로 적기영농에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조합과 남원시농정지원단에 농가 내역을 통보, 유기질비료의 이용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업생산비 절감 및 농촌 소득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PR]

익산시, 악취방지 시설 보조금 지원 실시

방지시설 개선 보조금 최대 90% 지원 악취 저감 유도



익산시는 ‘환경 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악취저감 시책 추진의 일환으로 악취방지시설 개선 보조금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도비 78백만원을 포함한 총 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악취방지시설 종류 및 용량별로 산정된 금액의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춰 실질적인 악취 저감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사업장에서 신청한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용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전라북도 기술지원단의 심사 및 기술지원도 받을 계획이다.

익산 제1·2산단과 산단 외 지역 악취배출 신고 대상 시설 중 중소기업 이하 사업장에 우선 지원하며, 해당 악취저감시설로는 세정식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원심

력집진시설, 흡착에의한시설, RTO(소각시설) 등이 해당된다.

환경관리과 김석우 과장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도 물론 중요하지만 업체에서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설 개선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 또한 행정기관의 몫”이라며 “올해는 다양한 악취저감 시책 추진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악취저감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1개 사업장에 총 2억 5백만 원을 지원하여 노후 방지시설 및 악취시설의 개선을 유도한 바 있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거나 환경관리과 악취 해소계 (063-859-5434, 5456)로 문의하면 된다. [PR]

경북도, 2,470억원 들여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지원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등 40여개 사업 국도비 지원으로 농가소득 견인
쌀 적정생산 및 농기자재 지원, 공익직불제 안착 등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경상북도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식량 생산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40여개 사업에 국·도비 2,47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과잉 생산되는 쌀의 적정 생산을 유도하고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과 올해부터 개편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착을 통해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에 벼 이외의 다른 소득작물을 재

배하여 구조적인 쌀 과잉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132억원, 대규모 벼 재배농가 대형농기계 및 특수미 생산을 위한 가공·유통 기반구축 지원에 15억원, 벼 육묘장 설치 및 농기자재 지원에 12억원을 지원한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도록 해 농기계 구입 부담을 줄여준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와 농기계 구입에 87억원을 투입하고 중소형농기계 구입에도 39억원을 지원한다.

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의 바탕이 되는 지력증진을 위해 토양개량제 지원에 99억원, 자연순환농업 정착을 위한 유기질비료 지원에 260억원을 투입한다.

1,8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된 직불제는 올해 6개의 직불제(쌀 고정·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통합되어 공익직불제로 개편됨에 따라 국비 예산 추가확보 및 제도의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PR]

보은군, '임산물 유기질 비료' 9만8천포 공급



은 4000원, 혼합유기질 및 유기복합비료는 1700원, 가축분퇴비 및 퇴비는 1400~1700원이다.

군은 영농철

보은군은 토양환경 개선과 고품질 청정 임산물 생산 증대에 앞장서기 위해 3억 4600만 원을 투입, 관내 1095농가에 농축산 부산물을 활용한 유기질 비료 9만 8000포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자는 관내 주소를 둔 대추 등 임산물 재배 농가이며 비종별 지원 금액은 1포(20kg)당 혼합유박

이전 초기 공급을 위해 지난해 11월 신청을 받아 물량 배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농가에서는 유기질 비료를 적기 살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임산물 재배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임산물 재배농가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PR]

축산농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 임박

2020. 3. 25부터 전 축종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관련업체 적용
주기적 부숙도 검사 및 부숙기준에 적합한 퇴비 살포 의무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지력을 향상시키는 유기질비료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일부 미부숙된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과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본격 시행되게 되었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시행의 대상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자가처리 농가) 및 관련업체의 퇴비화시설로, 가

축분뇨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규모 농가는 연 1회, 허가규모 농가 및 관련업체는 6개월에 1회, 법정 검사기관인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의

하여 검사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의 살포는 법정 검사기관에서 판정한 결과에 따라 부숙완료에서 부숙중기까지 가능하며, 축사면적 1,500㎡미만은 부숙중기 이상, 축사면적 1,500㎡이상 및 관련업체는 부숙후기 이상의 부숙된 퇴비를 살포해야 한다.

전라북도는 그간 도 및 시·군 환경·축산부서는 제도 시행전부터 퇴비 부숙도 제도 안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하여 가축분뇨 자가처리 농가에 대해 시료채취,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숙지하도록 '사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

고, 퇴비 부숙 요령, 부숙도 육안판별법 교육 등 '농가별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퇴비사가 협소하거나 교반장비가 없어 부숙도 기준 준수가 어려운 고령·영세 농가를 위해 공공처리시설 위탁처리를 유도하고, 퇴비유통전문조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아울러 2020. 3. 25 퇴비 부숙도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시설별 연1~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숙도 검사 실시 여부, 퇴비화시설 관리상태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부숙도 검사 미실시 및 미부숙 퇴비살포 등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 발견 시, 축산농가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관련업체는 고발, 400만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축산악취 저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 부숙도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업체에서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PR]

해남군, '19년 친환경 인증 5,340ha 전국 최대 달성

올해 친환경농업 육성 169억원 투입,
유기농 확산 등 질적 도약



친환경농업 1번지 해남이 올해도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체계 구축과 지속가능한 유기농 확산을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해 전국 최대 규모인 친환경 인증면적 5,340ha를 달성, 친환경 농업군의 면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3ha 증가한 수치로 유기 1,200ha, 무농약이 4,140ha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유기농 면적이 660ha에서 2배 가까이 증가했고, 벼 이외의 과수, 채소 등 86개 품목이 전체 인증면적의 41%(2,198ha)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되면서 전체 농업의 질적 도약도 이뤄내고 있다.

이에따라 2019년 전라남도 친환경 농업대상 지자체 분야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상사업비 5,000만원

을 확보하기도 했다.

올해도 유기농업의 지속적 확산과 인증 품목의 다양화,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등 22개 사업에 16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우선 친환경 실천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사업에 8억5,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며, 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에도 인증단계·품목별로 재배 난이도에 따라 ha당 50~120만원(벼 기준)을 차등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토양의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 감소를 위해 6,325농가에 6만 5,783톤의 유기질 비료를 지원한다. [PR]

창녕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환경 조성에 나서

안정적인 쌀 생산 및 친환경 농자재 지원, 공익직불제 시행 준비 착착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쌀 적정생산 유도와 쌀 소비촉진 지원확대를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 추진은 지난 1월 3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양곡소비량 조사결과'에서 2018년 61kg이던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2019년도에 59.2kg로 1년 만에 무려 1.8kg 감소에 따른 것이다.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15개 사업에 국·도비 44억 7100만원을 투입한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공익직불제 개편을 담은 「농업소

득보전법」 전부개정에 따라 군은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공익직불제 조기 정착을 위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

공익직불제란 농민 소득을 보전해주는 직불제를 보완해 시행을 앞둔 새로운 제도로 그간 6개로 나뉜 직불제는 쌀 중심으로만 운용된다는 불만들이 제기됐다. 직불금의 80%가량을 쌀 농민에게 지급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쌀 소비가 둔화해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직불제가 농사 규모가 작은 농민에게는 소득 안정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

적도 꾸준히 받았다.

이에 따라 쌀 직불제와 밭직불제 등을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 및 가격에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고 면적 구간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공익직불제가 탄생했다. 환경 보전, 공동체 유지 등 공익적 의무와 직불금 수급을 연계한 방식이다. 공익직불제는 2020년 중 세부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확정해 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18일, 군은 농산물품질관리원 창녕사무소와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접수체계 개선 및 기관별 업무분담 회의를 가지고 일선 공무원의 혼란 방지 및 불이익을 받

는 농업인들이 없도록 홍보와 교육에 힘써 업무의 효율을 꾀하고 있다.

군은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에도 36억 6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유기질비료 42,256톤, 토양개량제 1,637톤, 제초매트 55ha로 유기질비료는 환경 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의 정착과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총 5종이다.

[PR]

어미돼지, 무리 지어 키워도 새끼 잘 낳는다

동물복지 고려한 사육 시설과 관행 사육 시설 비교

사육 시설에 따른 어미돼지의 번식성적과 복지수준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발표했다.

농촌진흥청의 이번 연구는 군사(群飼, 무리기르기) 사육 시설이 어미돼지를 1마리씩 기르는 고정틀(단칸우리)을 대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들어 동물복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모든 회원국에 임신한 돼지의 고정틀 사육을 금지하고 있다.

연구진은 기존 사육 시설인 고정틀과 동물복지를 고려한 군사 사육 시설에서 임신한 어미돼지를 키우며 관찰했다.

〈 연구한 사육시설 종류 〉

개체별 고정틀 (관행 사육)	기존 사육 시설. 어미돼지를 1마리씩 사육하는 시설	
반스틀	기존 고정틀에서 문(또는 고정틀의 일부)을 제거한 형태	
자유출입스틀	- 어미돼지가 고정틀에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한 시설 - 어미돼지가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뒤로 걸어 나오면 문이 열림	
자동급이군사 시스템	- 컴퓨터로 제어 가능한 개체별 사료 급이 시설 - 40~50마리/대 사육 가능	

그 결과 어미돼지가 낳은 새끼돼지 수는 고정틀의 경우 12마리, 군사 사육 시설은 11.75마리로 나타났으며, 태어난 새끼돼지의 체중도 고정틀은 1.50kg, 군사 사육 시설은 1.53kg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어미돼지의 임신 기간은 모든 사육 시설에서 115일 정도로 나타났으며, 새끼돼지 출생 간격도 고정틀과 군사 사육 시설이 비슷했다.

다만, 여러 마리를 한 공간에서 키우는 군사 사육 시설의 경우 서열 다툼으로 인해 어미돼지의 피부상처가 더 많이 나타났다.

유럽연합의 경우 어미돼지의 서열 다툼을 완화하기 위해 보호칸막이와 환경보조물(짚, 형광 등)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축산법 시행령·규칙'에는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교배한 날부터 6주가 경과한 임신돼지를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군사 사육 시설의 적정 사육면적 수준 설정, 환경보조물 개발 등을 통해 어미돼지의 서열 다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각 농가에 맞는 군사 사육 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2021년까지 군사 사육 시설별 사양관리 매뉴얼(지침서)을 만들어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조규호 양돈과장은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방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다"라며, "축산법 시행령·규칙 개정에 맞추어 양돈농가도 새로운 사육방식을 준비하는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PR]

공간분석 위한 '토양도' 이제 쉽게 받는다

파일 업로드 시스템 구축으로 토양도 받기 쉬워져

농촌진흥청은 토양환경정보시스템 '흙토람'에서 토양도 자료를 직접 내려 받을 수 있도록 파일 업로드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파일 업로드 시스템 구축으로 신청자 전자우편(이메일)으로 토양도를 제공했을 때 생기는 첨부파일 용량 한계 등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토양도 신청내역과 활용사례 등이 데이터로 축적되어 토양도 활용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토양도는 1964년 시작한 전 국토 토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토양특성별 주제도를 작성한 것으로, 작물재배 관리를 비롯해 작물생산량과 토양환경 변화 예측, 자연재해 영향 분석, 문화재 지표조사, 생태가치 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에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이용한 공간정보자료가 여러 분야에 이용되면서 공간분석이 가능한 형태의 토양자료를 필요로 하는 곳

이 늘어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1 : 25,000 축적의 정밀토양도를 학교나 공공기관 등에서 비영리 공익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공간분석이 가능한 Shape파일이나 Grid파일로 무료 분양하고 있다.

토양도 신청 및 자료 내려 받기는 흙토람 누리집(<http://soil.rda.go.kr>)에 접속해 '토양정보신청'이나 '토양도'를 통해 할 수 있다.

토양특성별로 유효 토심, 배수등급, 분포지형, 토양통, 표토토성, 심토토성, 경사, 토양구조, 모암·모재, 토지이용추천 등 30종을 제공한다.

농촌진흥청 토양비료과 홍석영 과장은 "토양도 제공방법을 개선한 것은 정부혁신의 하나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데이터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간척지, 토지이용변화 지역 등 토양도 현행화와 제공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PR]

농약 다룰 땐 '마스크·장갑·방제복' 필수

피부로 흡수되는 양 더 많아...

조제 때는 장갑, 살포 때는 장갑과 방제복 효과



단하는 효과가 있었다.

농약을 뿌릴 때 장갑만 착용한 경우는 34%, 방제복과 장갑을 함께 착용한 경우는 78% 농약 차단 효과가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농약을 조제할 때는 장갑 착용이, 살포할 때는 장갑과 방제복 착용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은 조제, 살포 등 농약을 다룰 때에는 마스크뿐만 아니라 장갑과 방제복도 꼭 착용할 것을 당부했다.

2017년 국립농업과학원에서 조사한 우리나라 농작업자 개인 보호장비 착용 비율을 보면 농업인이 농약을 다룰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호 장비는 마스크(67%)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농작업자 농약 노출량 산정 모델(KoPOEM)을 통해 농약 조제, 살포 시 보호 장비 착용에 따른 농작업자 보호 정도를 알아본 것이다.

연구 결과, 농약을 조제할 때 마스크만 낀 경우는 8%, 장갑만 착용한 경우는 92%, 마스크와 장갑을 함께 착용한 경우는 99% 농약을 차

이는 농약 조제와 살포 시 입이나 코로 흡수되는 양보다 손 등의 피부로 흡수되는 양이 더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홍수명 과장은 "이번 농약안전사용 지침은 온 국민에게 안전농약사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이라며, "농약을 다룰 때는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마스크 착용은 물론, 장갑과 방제복도 잊지 말고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PR]

KoPOEM이란, 농약 살포시 농작업자의 농약 노출량을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농약살포량, 살포기기, 개인보호장비 착용 등의 요인들을 설정하여 노출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현재 농약 등록단계에서 농약살포자 위해성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식품 분야 제도

◆ 농가 소득안정 및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공익형 직불제 시행

기존 6개의 직불제(쌀고정, 쌀변동, 밭농업, 조건불리, 친환경, 경관보전)가 공익형 직불제로 통합·개편돼 운영된다.

중복지급이 불가능하고,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 직불, 밭 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하며, 이런 기본직불제는 다시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일정 직불금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제와 면적을 기준으로 역진적 단계체계를 적용한 면적직불제로 분류돼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및 경관보전직불 등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하며,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공익형 직불제는 관련 법률인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에 따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 청년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대상 모든 대학(일부제외) 확대

2020년 1학기부터 농업분야 취·창업 의무장학금(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지원 대상을 기존 농대에서 모든 대학(일부제외)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은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구조 마련을 위해 농대생 3~4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작년 2학기부터 도입됐다.

올해부터는 청년층의 농업·농촌 진입 실질적 효과 제고를 위해 지원 대상을 비농대생(3~4학년 재학생)까지 확대한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 전액과 함께 학업장려금 200만원, 재학 중 농업 전문 교육기관을 통한 실습 중심 교육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원하는 임산부(임신부+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12개월간(연간 48만원 상당) 공급된다.

이 제도는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해 국민건강과 환경보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대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에서,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신부부터 적용된다.

◆ 농작물재해보험 품목확대 및 농기계종합보험 지원강화

농업정책보험을 강화해 농업경영안정망이 확충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현장 수요를 반영해 5개 품목(팥, 살구, 시금치, 보리, 호두)을 신규 도입된다.

농기계종합보험도 영세농가(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국고지원이 강화된다.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조건 개선

전문 농업인력 육성 및 농업분야 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

예비농업인의 신규 영농창업 또는 농업인의 영농 규모화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조건(거치·상환) 제도를 개선했다.

현행 최대 3억 원, 금리 2%, 3년 거치 7년 상환에서 최대 3억 원, 금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바뀌었다. 개정내용은 1월 1일부터 적용 시행되고 있다. [8면에 계속이어짐]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폐기물 다량 배출자에게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여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3년마다,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

다량으로 배출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때까지 배출자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을 예방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완료(2019년 11월 26일 공포, 2020년 5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제도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폐기물 배출 신고 대상자는 본인이 배출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할 때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에서 제공하는 처리업체의 정보를 확인하여 폐기물의 처리 위탁 계약을 맺고, 체결한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현장감시,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위해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장관

이 지정하는 전문기관

아울러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는 1개월마다 폐기물의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징후를 발견하면 폐기물의 처리 현장을 직접 또는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폐기물의 불법처리가 발견되면 위탁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이는 ‘환경정책기본법’ 상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처리 과정의 적정성을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려는 조치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르면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의 경우에는 3년마다,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경우에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의 자격 및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에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폐기물관

리법’을 위반하지 않는 우수 업체의 경우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여 1천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으면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또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자에게 영향을 미쳐 불법폐기물 발생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 역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폐기물처리업의 결격사유를 이전보다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전력이 있는 폐기물 처리업체의 시장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폐기물 발생에 책임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불법폐기물의 양에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에 따른 처리단가를 곱한 금액(폐기물부적정처리이익)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부과하여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한다.

이에 더하여 불법폐기물을 제거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등의 변형을 원상회복 하는 데에 필

요한 비용까지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으로 함께 부과한다.

이는 불법폐기물 발생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 부과를 위해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려는 조치다.

이 밖에 양도·양수, 합병·분할 등의 이유로 폐기물처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위해서는 종전 명의자가 미이행한 법적 책임에 대한 이행 계획,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법령에서 규정한 허용보관량의 2배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보관할 때는 해당 사업장 내로 추가적인 폐기물의 반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및 주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PR]

['7면 2020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농식품 분야 제도'에 이어]

◆ 축산물이력제도, 닭·오리·계란까지 확대

올해 1월 1일부터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축산물이력제가 닭·오리·계란까지 확대해 시행된다.

닭·오리 농장은 사육 현황을 매월 신고해야 하며, 농장간에 가축을 이동할 때에도 신고를 해야 한다.

축산물이력제 의무적용 대상 영업자는 기존의 소·돼지와 마찬가지로 영업자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하며 의무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닭·오리고기 및 계란에 이력번호가 표시되며 사육·도축·포장·판매 등 단계별 거래정보가 소비자에게 제공된다.

가축거래상인도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하는 경우 이동 신고를 해야 하며, 학교 등 집단급식소, 700㎡이상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통신판매업자는 기존의 수입산 축산물과 마찬가지로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공개(표시·게시)해야 한다.

◆ 농어촌빈집 단계적 정비절차 마련

농어촌 지역에 방치돼 피해를 주는 빈집을 단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절차가 새롭게 추가된다.

국민 누구나 '특정빈집'으로 의심되는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빈집이 안전·위생·경관 등 주변에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조사해 특정빈집으로 확인되면 빈집 소유주에게 개선방법을 조언해(행정지도)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럼에도 계속해서 농어촌 생활환경에 피해를 주는 특정빈집은 지자체에서 직접 철거할 수 있다.

개정 내용은 국회 심의절차를 거쳐 '농어촌정비법' 개정·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기회 등 확대

건축행정 절차 관련 사업신청 가능 조건이 변경돼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착공신고를 한 경우 사업신청이 불가능했다. 또 선금(중도금 포함) 융자·대출금 상한액이 4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개정 내용은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에게 적용된다.

◆ 성범죄자 농어촌민박사업 금지 조항 신설

성범죄자가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시설에 대해 사업장 폐쇄 및 영업정지를 시행하고, 일정기간 동안 같은 종류의 사업을 금지하도록 변경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또한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2년간, 해당 사업장은 1년간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은 오는 7월(잠정)부터 적용되며, 개정 내용 시행 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의무 강화

농어촌민박의 소방 및 안전시설 설치와 사업자의 안전교육이 강화된다. 소규모 숙박시설에 필요한 소방시설 및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휴대용비상조명등, 유도표지(연면적 150㎡ 이하), 파난구유도등(150㎡ 초과), 완강기(3층 이상 건물) 등이 기본 시설로 설치돼야 한다.

또 화기취급처(보일러실, 주방 등)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각실 포함), 가스누설경보기(가스 사용시), 자동확산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설치돼야 한다.

또한 농어촌민박사업자 필수교육 중 안전교육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강화되고 개정 내용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적용되고 있다.

◆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 및 운영기간 확대

농촌보육여건개선 사업 대상자와 운영기간이 확대된다. 영유아수 감소 등 여건변화를 고려해 농촌지역 소규모 어린이집을 지원하는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사업의 대상자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까지 확대한다.

또 농번기 주말 동안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농번기 아이돌봄방' 운영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된다.

◆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기축산물로 단일화

친환경농어업법 상의 친환경축산물 인증이 국제인증체계에 맞게 유기·무항생제 축산물에서 유기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된다.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은 항생제 사용 저감이라는 제도 취지를 유지할 수 있도록 축산법으로 이관해 별도 인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친환경'이라는 용어는 유기축산물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무항생제 축산물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내용은 오는 8월 28일부터 적용된다.

◆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 실시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친화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다양한 수요를 고려한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소비자에게 선택의 다양성을 제공키 위한 고령친화식품 인증제가 시행된다.

기존 민간 가이드라인용으로 제정된 '고령친화식품 표준'을 식품공전의 기준과 부합하도록 표준을 개정하고 인증제 운영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식약처 규격을 적용한 영양성분 품질기준 분석법 기준 마련, 다양한 물성을 가진 식품의 물성 분석이 용이하도록 각 단계별 분석법 별도 규정, 표시문안 마련 등이다.

개정된 표준과 제정된 인증기준을 활용해 올해부터 '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를 본격 실시한다.

◆ 농·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유효기간 3년 설정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법인인 최초등록 또는 변경등록 후 3년이 경과하기 전에 경영정보를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정책수립, 보조·융자금 지원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경영체 등록정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농상황 변동시 자발적으로 변경등록(연중 가능)을 하여야 한다.

경영정보를 성실히 등록한 농업경영체에 정책자금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말소처리 된다.

개정내용은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나, 시행일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영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변경등록이 가능하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 원유(原乳) 국가잔류물질검사(NRP) 제도 도입

원유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 검사가 강화된다. 현재 집유장에서 책임수의사가 원유에 대해 항생제 등의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에 대한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국가잔류물질검사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작년 12월까지 원유 국가잔류물질검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검사기관의 사전 준비 기간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 재사용 화환 표시제 도입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은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에 대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화환을 제작·판매할 경우,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할 경우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재사용 화환임을 고지해야 하고, 제정 내용은 오는 8월 21일부터 적용된다.

◆ 친환경인증 사업자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 의무화

친환경인증 사업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는 기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친환경농업 기본교육' 이수와 관련해 교육일정 등 궁금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